

'조국 사태' 비견되던 추미애 아들 논란, 미풍에 그치나

파급 큰 병역·교육 분야... '검찰개혁' 상징 공동점 정권 혼든 조국 vs 잦아든 秋 논란... 與 대응 여유

제2의 조국 사태'로 비화되지 않겠느냐는 관측도 나오던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군휴가 특혜 의혹이 한 고비를 넘기는 모양새다.

추 장관을 상대로 야권의 집중 포화가 쏟아졌던 대정부질문 기간에도 결정적 한 방은 없었던 데다가 정부·여당 지지율이 큰 변동 없이 견조하게 유지된 때문이다. 일각에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로 국민들이 장만한 사람의 가슴에 오래 함몰될 상황이 아니라는 분석도 내놓는다.

추미애·조국 두 법무부 장관 사건은 공통점이 많은 것으로 보였다. 병역과 교육은 세대대로 2030 청년 남녀와 4050 부모세대를 모두 건드리는 파급력이 큰 이슈다. 오히려 사모펀드 문제로 번지며 복잡해진 조국 정국보다 성인 남성 대부분이 경험하는 군복무가 얽힌 추 장관 논란의 휘발성이 더 크다고 할 수도 있었다.

여권이 두 장관에 '검찰개혁' 상징성을 부여하고 총력 업호에 나서는 모습도 겹친다. 추 장관의 거취를 놓고 여야 지지층이 각각 결집해가는 양상도 지난 조국 정국의 광화문과 서초동 집회를 떠올리게 하는 지점이다. 그러나 조국 정국은 여권을 코너로 몰아간 반면, 추 장관 논란은 점차 가라앉는 기류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8일 "과잉대응은 자제하는 게 옳다"면서 발언 자제령을 내린 것도 한편으로는 민주당이 여유를 찾아가고 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외부의 공세보다 이를 받아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변수를 줄여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당부다. 일례로 추 장관을 엄호하려던 여권 인사들이 설화를 일으켜 오히려 논란을 키운 바 있다.

이러한 조국 사태의 영향은 여론조사에서 극명히 드러난다. 조 전 장관 사퇴 직전인 지난해 10월 2주차(7~8,

10~11일) 리얼미터 조사에선 문재인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율이 41.4%로 취임 후 최저치까지 떨어졌다. 민주당 지지율도 일간 집계에서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에 뒤처졌다.

추 장관 논란이 접화된 초기에는 정부·여당 지지율이 동반 하락하며 요동치는 모습을 보였다. 리얼미터 9월 2주차(7~11일) 여론조사에서 문 대통령 국정 지지율은 45.6%로 3주 만에 부정평가가 앞섰고, 민주당(33.7%)과 국민의힘(32.8%) 지지율은 소수정대로 좁혀졌다.

그러나 같은 기관의 14~16일 여론조사에선 대통령(46.4%)과 민주당(35.7%) 지지율이 동반 상승했다. 국민의힘(29.3%)은 도로 20%대로 떨어지며 여야 격차도 오차범위 밖으로 다시 벌어졌다. 추 장관 문제가 단기적인 하락요인으로 작용했지만 과장이 오래가지는 않았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리얼미터 관계자는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세간의 생각과 달리 추 장관 요인은 별로 하락요인이 아니었다. 지난주의 하락은 통신비 2만원 이슈가 컸다"고 짚었다. 정부·여당의 반등 요인으로는 사회적 거리두

기 2단계 완화 등 코로나 방역 호조를, 국민의힘의 하락요인으로는 추 장관 논란의 정치 문제화에 따른 피로감을 각각 꼽았다.

유창선 정치평론가는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조 전 장관은 여러 사안이 복잡하게 동시적으로 얽혀 의혹의 가짓수가 많았다"라며 "반면 추 장관의 경우 사안 자체는 비교적 단순한 것이고 여러 의혹이 얽히고설킨 것은 아니어서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선 지난 21대 총선 패처럼 코로나 이슈가 강한 국면에서 여야 정치 공방 양상을 보이는 추 장관 이슈가 부각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코로나 재확산에 따른 방역 피로감과 경제 위축 이종고가 짓누르는 국난 상황에서 민생과 동떨어진 문제에 오랫동안 눈 돌릴 여유가 없다는 것이다.

실제로 지난 9월 1~3주차 한국갤럽 여론조사를 보면, 문 대통령 국정수행 부정평가 이유로 '인사 문제'를 꼽은 응답은 4%→11%→17% 순으로 점차 비중이 높아지고는 있으나, 국정 공·부정평가는 45%대를 유지하며 큰 변동이 없었다. 같은 시기 직무수행 긍



정평가로 '코로나19 대처'를 꼽은 응답은 44%→39%→38%로 점차 비중이 낮아지는 추이이나 여전히 긍정평가 요인 중 다수를 차지하고 있었다. 반면 지난 2019년 9~10월 조 전 장관의 취임부터 사퇴까지의 대통령 국정 지지도 부정평가를 이끈 1순위는 '인사 문제'로, 30% 내외에 달했다. 조 전 장관 사퇴 직전인 지난해 10월 2주차(8, 10일) 조사에선 대통령 직무수행 부정평가 요인으로 '인사 문

제'(28%)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국론 분열·갈등(6%)을 꼽은 응답도 나왔다.

신을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항상 큰 이슈가 작은 이슈를 잡아먹는다. 추 장관 문제는 국민들이 '기막힌 소리를 한다' 하고 넘어갈 수 있다"라며 "이슈가 커질 여유가 사람들에게 없는 것이다. 결국 문제는 경제"라고 했다.

뉴시스

이낙연 "이재민 편에서 섬진강댐 수해 참사 규명하겠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당대표가 19일 오후 전남 구례군 구례읍 양정마을을 수해 현장을 방문, 피해 주민들과 간담회를 갖고 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9일 전남 구례 집중호우 수해 현장을 찾아 "이재민의 편에서 섬진강댐 무단 방류에 의한 인재(人災) 의혹을 규명할 최선의 방법을 찾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대규모 수해 피해가 집중 발생한 구례군 구례읍 일대를 방문, 정부의 댐 관리 실패에 거세게 항의하는 주민들을 만나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환경부 주관으로 '댐관리 부실' 의혹에 대한 전문가 조사가 진행 중이다"며 "수해의 원인과 경위를 밝혀내는 데 무엇이 더 좋은 방법을인지 판단하는 것은 (정부·여당에) 맡겨달라. 전국 수해 이재민들의 성난 목소리를 청와대와 정부에 가감없이 잘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5일시장 상인들은 간담회장 안팎에

구례5일장·양정마을 등 집중호우 피해 현장 비공식 방문 "복구 지원·피해 보상, 최선 다하겠다"...제도 개선도 약속

서 '국정조사를 추진하라', '40여 일이 넘도록 조사도 제대로 안했다', '어떻게 책임지겠느냐' 정부 못 믿겠다. 정치권이 나서라'며 거세게 항의했다.

이에 대해 이 대표는 "국회를 가면 뭐든지 정치가 된다"며 국정조사에 대한 선을 그었다.

이어 "일련성망 조사를 끝내겠다는 것이 아니다. 주민들의 의혹을 해소할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조사 방안을 강구하겠다"며 "정부 입김이 반영된 조사 결론이 나오지 않도록 이재민의 입장에 서겠다"고 답했다.

빠른 수해 복구를 위해 전폭적인 지원에 나서겠다는 뜻도 전했다.

이 대표는 "우선 현행 제도를 통해 피해 복구를 최대한 지원하겠다. 제도를 뛰어넘어 주민 생활 안정에 도움이 될 지원책이 있는지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또 "현행 제도는 피해 규모가 아닌 복구비를 기준으로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 이번 정기국회부터 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면서 "재해 예산 규모, 특히 사유재산 피해 지원을 늘리는 방안에도 대해서도 연구할 계획이다"고 덧붙였다.

보상에 대해서 "법적인 판단은 시간이 걸리고 당사자간 다툼이 있다"면서 "주민 우려도 충분히 이해한다. 허투루 대응할 사안이 아닌 만큼, 정부에 신속한 해결을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어떤 해결책을 내놓아도 이재민이 수용 못하면 끝나는 게 아니라 하는 것을 알고 있다. 절망·분노를 생생하게 들었고, 구상 중인 해법이 국회에서 관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역설했다. 구례=박진호 기자

"스스로 감사원에 감사청구해 객관적 감사로 신뢰 확보해야"

소병철 의원 "다른 접근 필요"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갑, 법사위)이 최근 박재현 한국수자원공사(이하, 수공) 사장을 만나 "환경부 자체조사는 어떠한 결과가 나오더라도 피해주민들이 완전히 승복하지 않을 소지가 크다"며 "수공 스스로 환경부 조사가 아닌 감사원을 통한 감사를 청구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소 의원은 "환경부는 홍수관리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하는 수해 책임 당사자이며 수공은 환경부 산하 기관이기 때문에 피해주민들이 조사결과를 신뢰하기 어렵다"며 "피해주민들 뿐만 아니라 한국수자원공사와 환경부 측에도 후유증을 적게 하는 과거와는 다른 접근방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피해주민들의 외침을 외면하고 이 문제를 오래 끌고 가면 상처는 덧

나게 될 것"이라며 "정부의 특별재난 지역 선정에 따른 지원이 다 이뤄지기 전에 수공의 배·보상 절차가 다 끝나야 한다"고 요청했다.

소 의원은 "순천의 황전면도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됐다"며 "정부의 특별재난지역 지정에 따른 후속절차가 끝나기 전에 정부의 지원과 함께 수공의 배·보상이 이뤄진다면 피해주민들 입장에서도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며 분쟁이 빨리 종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소 의원의 이러한 제안에 대해 박 사장은 "수공은 환경부 산하기관으로 독자적인 의견을 내기에 어렵다는 점을 이해해 달라"면서 "누가 얼마만큼의 책임이 있는지에 대해 전체적으로 정리를 해 줄 수 있는 국가차원의 위원회 등이나 감사원의 감사로 가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며 긍정적 반응을 보였다.

동부취재본부 김승호 기자

호남신문 광고안내

광고주는 언론 종사자와 더불어 신문산업 발전의 동반자입니다. 한 분 한 분을 소중하게 여기고 단 한 줄의 광고도 감사히 지면에 반영하겠습니다. 믿고 맡겨 주십시오. 여러분의 기대에 신뢰로 보답하겠습니다.

기사제보
(062)
222-2580

광고문의
(062)
228-2580

축하·근조화환 전문점



전국 꽃배달 서비스

60,000

농장직영 광주꽃도매

直通전화 010-2400-7774

주문팩스 062-946-0053